

# 人口政策을 위한 組織 및 機構上의 諸問題

安 啓 春

延世大學校

## I. 序論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나라에서 人口政策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에 따라 人口政策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 政府 機構가 여기 저기 設立되고 人口問題와 관련된 여러 研究機關이 設立된 것도 또한 事實이다. 여러가지 人口政策가운데 어떤 것은 比較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評價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큰 成課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人口政策의 成果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人口政策의 樹立과 執行에 관련되는 組織 및 機構上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要因中的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우리 나라의 人口政策 樹立 및 執行에 관련되는 組織 및 機構의 現況을 檢討하고 現在의 組織 및 機構上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前提는 어떻게 하면 國家的인 次元에서 적합한 人口政策을 수립하고 그것을 効率的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政黨이나 政府部處, 어느 機關이나 職業集團의 利害關係보다는 國家의 利益이 가장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 하나의 前提는 人口政策은 다른 여러가지 社會經濟政策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具體的인 여러 人口政策 상호간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社會·經濟政策이 人口政策과 서로 獨立的으로 수립·집행될 수 없다는 것과 개별적인 人口政策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수립·집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敷衍해둘 것은 많은 사람들이 人口政策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人口政策에 대한 어느 정도 共通된 理解가 필요하다. 여기서 筆者가 말하는 人口政策은 “여러 가지 人口現象에 어떤 變化를 가져오기 위하여 意圖的으로 考案된 政府의 모든 施策”을 말한다. 여러 가지 人口現象이라함은 出生, 死亡, 移動등 기본적인 人口過程은 물론 그 결과로 나타난 人口成長, 人口構成, 人口의 地域的 分布, 人口의 資質 등을 모두 포함한다. 國家의 여러가지 社會·經濟政策은 모두 특수한 目的을 위해 실시되지만 그것들이 직접·간접으로 人口現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人口政策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政策들은 모두 一次的인 目的을 別度로 가지고 있으며, 人口現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考案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人口政策과 관련된 組織 및 機構上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人口政策의 수립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中央政府와 그에 관련된 중앙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따라서 人口政策의 執行을 위한 地方이나 최일선의 組織上 문제들은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 II. 人口政策과 관련된 政府機構

우리 나라 人口政策의 最高決定機構은 1976년에 設置된 人口政策審議委員會이다. 이 委員會는 經濟企劃院長官을 위원장, 保社部長官을 부위원장, 관련부처(內務部, 法務部, 文敎部, 文化公報部, 建設部 등)의 長官과 民間人 專門家 약간명이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委員會의 下位機關으로는 經濟企劃院 次官을 委員長으로하고, 관련 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人口政策實務委員會가 있다. 이 두 委員會는 구성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人口政策을 종합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최고 정책결정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人口政策審議委員會의 業務를 지원하기 위한 機構로는 韓國開發研究院(KDI)에 設置된 人口政策事務局과 經濟企劃院 企劃局의 投資四課가 있다. 人口政策事務局은 KDI 副院長의 책임하에 주로 人口政策審議委員會의 運營에 필요한 事務를 담당하고 人口政策과 다른 社会經濟政策을 連結시키는 機能을 担当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投資四課에서는 각 관련부처의 계획을 종합하여 人口政策審議委員會에서 심의할 案件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決定된 政策이 執行되도록 각 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人口政策審議委員會가 과연 얼마나 그 본래의 設立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는가하는데 대해서는 몇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人口政策審議委員會에서 심의하는 內容이 人口政策의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表1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이 委員會에서 그 동안 취급된 案件을 보면 주로 人口成長에 관한 政策中 家族計劃事業에 관한 內容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人口移動이나 分布, 人力開發등에 관한 政策은 전혀 論議된 바 없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 委員會의 委員들 사이에 人口政策의 중요성에 대한 認識이 아직 不足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人口政策審議委員會가 設置된지 2年이 지나도록 1회의 本會議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事實, 3次的 實務委員會에 실제로 委員들이 參席하는 예가 드물고 그 部下 職員들이 參席하는 예가 많았다는 事實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人口政策審議委員會의 업무를 돕기위해 KDI에 설치된 人口政策事務局은 社会經濟開發計劃과 人口政策을 연결시킬수 있는 機能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만 KDI의 性格上 人口政策을 執行하는데 調整機能을 담당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人口政策의 樹立은 人口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인구정책사무국의 人力으로는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연구활동을 모두 담당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人口政策審議委員會의 업무를 돕는 企劃局의 投資四課는 주로 社会開發計劃 전반을 다루고 있어 人口政策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投資四課에는 人口政策만을 專門으로 취급할 수 있는 人力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처지에서 人口政策審議委員會에서 심의할 政策을 立案하고 결정된 政策이 집행되도록 各部處間의 업무를 調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人力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課의 수준에서 각 부처의 업무를 調整하는데 있어서는 權威의 문제도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현재 인구정책 조정업무는 經濟企劃院 企劃管理室長의 비공식적 업무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은 조치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지 人口政策의 집행을 위한 항구적인 制度化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1. 人口政策審議委員會 運營現況

日 時	場 所	會 議 內 容	會議区分
1976. 12. 2	經濟企劃院會議室	1. 人口政策推進計劃(案) 內容: 人口政策의 基本方向으로서 ① 人口增加抑制의 強化 ② 人口配置計劃의 推進 ③ 人的資源의 活用으로 定한 推進計劃으로 ① 組織運營体制改善 ② 避妊事業의 擴大 ③ 社会的 雰囲気造成 ④ 새로운 意識構造誘導 ⑤ 計劃性 있는 移住事業의 擴大 ⑥ 移住行政 및 節次의 改善을 討議	本會議
1977. 3. 10	經濟企劃院會議室	1. 人口政策細部推進計劃 內容: 保社部를 爲始하여 서울特別市에 이르기까지 16個 政府部處 내지 官署가 具體적으로 擔當해야할 家 族計劃事業 내지는 그 支援政策	實務會議
1978. 3. 10	經濟企劃院會議室	1. 1977年度 家族計劃事業 推進実績 2. 1978年度 家族計劃事業 推進計劃	實務會議
1978. 8. 3	經濟企劃院會議室	1. 1978年度 上半期 家族計劃事業 推進現況 2. 人口研究院設立(案) 3. 保健要員統合 및 陽性化方案	實務會議

資料: 金道昶, 韓國人口問題의 未來

人口政策事務局 이나 投資四課가 모두 人口政策審議委員會를 돕는 機構이고 이 兩者 사이에는 어느정도 명확한 업무의 区分이 公式化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업무한계가 분명치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매우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서로 다른 機關에서, 서로 다른 취향과 가치지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 1. 人口成長에 관한 政策을 擔當한 機構과 組織

우리 나라의 人口成長에 관한 政策은 이미 다른 論文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人口成長을 둔화시키려는 政策으로 대표되며, 이는 出産의 調節을 통하여 出産率을 감소시키려는 政策과 海外移民을 장려하는 政策으로 집약된다.

出産力을 감소시키려는 政策은 保社部 母子保健 管理室의 家族計劃課에서 擔當하고 있는 家族計劃事業이 주종을 이룬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家族計劃事業이 出産力을 저하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自他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앞으로의 家族計劃事業은 새로운 轉換期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家族計劃의 범위를 넘어선 여러가지對策(Measures beyond family planning)들이 점차 강조되고, 家族計劃事業을 다른 社會開發事業과 統合運營하는 접근방법(Integrated approach)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家族計劃事業은 保社部 이

외의 관련 部処와의 協力과 調整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현재 保社部 母子保健管理室에는 이러한 機能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러한 機能이 부여된다해도 과연 保社部에서 다른 部処간의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전국에 걸친 방대한 家族計劃事業을 추진하는 家族計劃課의 人力은 매우 不足한 편이다. 이러한 人力의 不足은 家族計劃事業을 측면에서 支援하는 民間團體인 家族計劃協會와 특수법인인 家族計劃研究院 두 機關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항구적인 制度化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단체인 家族計劃協會 (PPFK)는 政府의 家族計劃事業을 위한 弘報啓蒙活動을 담당하고 있고, 國際家族計劃聯盟 (IPPF)의 支部로서 독자적인 家族計劃 支援事業을 맡고 있다. 家族計劃研究院은 保社部 산하에 설치된 特殊法人으로써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研究 評價 활동과 각급 家族計劃要員의 訓練을 담당하고 있다. 保社部 家族計劃課와 家族計劃研究院, 家族計劃協會三者 사이에는 어느 정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동안의 事業成果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三者 사이에는 아직도 機能의 分化가 애매한 경우도 있고, 業務上的 協助가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人口의 海外移住를 통하여 人口成長率을 억제하려는 政策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保社部 移住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海外移住業務는 人口成長率의 억제라는 綜合的인 政策의 테두리 안에서 計劃되고 집행되었다기 보다는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의 獨立的으로 계획되고 집행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그동안의 海外移民이 나간 만큼 人口成長이 억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의 人口成長率을 낮추는데 그렇게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人口의 海外移民은 물론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여러가지 條件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므로 移民을 計劃하고 推進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관계부처(특히 外務部)와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人口成長의 決定要因中的의 하나가 死亡이므로 死亡에 관한 政策도 人口政策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國家를 막론하고 死亡에 관한 政策은 死亡率을 낮추려는 노력이 외에 별다른 政策이 따로 없다. 그러므로 死亡에 관한 政策은 保社部에서 담당하고 있는 保健醫療政策으로 대표된다. 保健醫療政策은 人口成長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人口成長을 억제하려는 政策과는 相反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理由로 이 兩者가 서로 獨立的으로 計劃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이 두가지 政策도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 計劃되고 執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 2. 人口移動(國內) 및 分布에 관한 政策을 담당한 機構와 組織

우리 나라의 人口移動 및 分布에 관한 政策은 首都圈人口集中 抑制政策과 國土開發計劃에 따른 人口再配置計劃이 주종을 이룬다. 首都圈人口集中 抑制政策은 大統領의 지시에 따라 (1976) 第1無任所 長官室에서 長期研究토록 되어있고, 人口再配置計劃은 建設部の 國土開發綜合計劃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後者は 개념상으로 首都圈人口抑制政策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1977년에는 建設部에서 首都圈人口再配置 基本計劃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首都圈人口抑制政策을 둘러싸고 第1無任所 長官室과 建設部 사이에 어떻게 機能이 分化되어 있으며, 機能이 서로 分化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業務를 서로 다른 部処에서 어떻게 協助하여 計劃하고 執行하느냐 하는 것

이다. 筆者의 관찰로는 機能上의 分化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部処間의 協力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問題는 人口移動 및 分布에 관한 政策을 樹立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研究活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活動을 위한 專門人力이 두 部処에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建設部 산하에 國土開發研究院이 設立되었으나 그러한 人力을 確保하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 首都圈人口抑制政策이나 人口再配置計劃은 人口政策審議委員會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 政策들이 綜合的인 人口政策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부처에 의해 독립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人力開發에 관한 政策을 담당한 機構와 組織

우리 나라의 人力開發에 관한 政策을 담당한 機構로는 科學技術處의 人力計劃官室과 勞動廳의 人力開發官室이 있다. 이 兩者의 業務가 어떻게 다른지는 분명치 않지만, 科學技術處의 人力計劃官室은 주로 科學技術系 人力을 다루고 勞動廳의 人力開發官室은 주로 勞動人力을 다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科學技術系 人力과 勞動人力의 한계 역시 분명치는 않지만 여하튼 이 두가지가 전체 勞動力(labor force)의 部分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勞動力에 관한 政策은 人口政策의 一部이므로 이 두 機構의 政策은 人口政策審議委員會의 심의사항에 속한다. 그러나 人口政策審議委員會에서는 이 분야의 政策을 지금까지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것은 人力開發에 관한 政策이 綜合적인 人口政策의 일환으로 취급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됨을 의미한다. 또한 科學技術處의 人力업무와 勞動廳의 人力업무가 그 對象은 다르나 하나라도 서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업무에 있어서 긴밀한 協助가 이루어질 수 있는 制度的 정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두 機構에 각각의 업무에 관한 政策 수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專門研究人力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문제이다.

## Ⅲ. 人口政策을 뒷받침하는 研究機關

우리 나라의 人口政策樹立을 뒷받침하는 研究機關은 政府와 관련된 여러 研究機關과 大學의 相關 研究機關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前者만을 고려의 對象으로 한다.

### 1. 家族計劃研究院

‘家族計劃研究院은 保健社會部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주로 家族計劃事業에 대한 研究, 評價 활동과 各급 家族計劃要員의 訓練을 담당하고 있다.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사업의 개선에 기여하고, 事業에 대한 評價結果 역시 사업의 개선에 이용되고 있다. 그밖에 出産力의 측정은 물론 그와 관련되는 要因에 관한 基礎研究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家族計劃研究院은 그 명칭상으로는나 그 機能上으로는나 人口에 대한 綜合的인 研究를 하는 機關은 아니다. 이 機關에는 인구나 相關되는 各 분야의 研究人力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기관의 성격상 연구활동이 家族計劃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家族計劃 이외의 綜合적인 人口政策을 뒷받침할만한 研究活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家族計劃研究院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機關의 自律性에는 상당한 制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家族計劃研究法에 규정되어 있는 정도의 自律性이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 가장 큰 理由는 保社部를 통하여 國庫補助를 받는 산하기관이라는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 結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때로는 계약을 받기도 하고, 객관적인 情報의 還流(feedback)가 지연되거나 제한을 받기도 한다.

## 2. 人口政策事務局 (KDI)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韓國開發院에 설치된 人口政策事務局은 KDI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社會·經濟政策과 人口政策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치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部分的으로나마 研究活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綜合的인 人口政策을 뒷받침할 수 있는 研究人力은(量에 있어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그러한 目的으로 설립된 기구도 아니다. 이 기구가 잠정적으로 수행하는 일의 하나는 국내 각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적은 人力으로 人口政策審議委員會의 事務局 업무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구의 研究機能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3. 人口問題研究所

人口問題研究所(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는 원래 經濟企劃院 산하에 設立된 社團法人으로 인구에 관한 종합적인 研究機關으로 출발하였다(1965). 당초에는 經濟企劃院을 통한 國庫補助로 운영되었으나 1967년 이후 國庫補助가 끊어지고, 그 후 研究所의 運營權이 몇번 바뀌었다. 그러는 동안 당초에 확보했던 研究人力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런중에도 人口問題論集은 계속 발간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현재 이 研究所는 뜻있는 企業人의 支援로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 常任研究人力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지급에 와서는 政府와의 관련성이 더욱 악화되어 정부의 종합적인 人口政策을 뒷받침할 수 있는 機能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4. 調査統計局 人口統計課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人口統計課는 우리 나라의 人口센서스와 人口動態統計를 蒐集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機關은 원래 研究機關은 아니지만 人口分野에 훈련된 人力을 약간 확보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인구에 관한 研究活動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機關은 어디까지나 人口統計의 蒐集·生産을 主機能으로 하고 있으며 人口政策의 樹立 그 자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研究機關은 아니다. 하지만 가장 基本的인 자료의 생산기관으로서 다른 研究機關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 5. 人口教育中央本部 事務局

人口教育中央本部는 각급학교에 人口教育을 보급하기 위하여 文敎部에 임시로 設置된 機構이며 文敎部次官이 그 責任을 지고 있다. 이 機構의 業務는 실제로 韓國教育開發院(KEDI)에 設置되어 있는 事務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機構는 각급학교에 人口教育을 실시할 수 있도록 教科課程을 개발하고 필요한 敎員의 研修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機構는 엄격한 의미에서 人口에 관한 研究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급학교의 教科課程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그 基礎資料를 필요로 한다. 人口教育事務局에서는 그동안 獨自的으로 기초자료를 개발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그러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IV. 結論 및 提言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人口政策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政府 機關과 人口政策을 뒷받침할 수 있는 研究機關들의 組織上의 現況과 問題點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의 人口政策을 綜合的으로 심의 결정하는 人口政策審議委員會가 構成되어 있지만 그機能은 주로 人口政策의 一部에 국한되어 있고, 여러가지 人口政策이 각기 다른 機構에 의해 거의 独立的으로 수립되고 집행됨을 알았다. 具體的인 人口政策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서로 다른 部處에서 담당하고 있는 人口政策들은 綜合的으로 調整되어야 한다. 각부처의 소관 人口政策을 종합하고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綜合的인 人口政策을 수립하고, 이것이 인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면 그것이 집행되도록 調整하는 機構가 필요하다. 현재 經濟企劃院의 投資四課는 이러한 業務를 수행하기에는 機能面에서나 人力面에, 그리고 權威面에서 매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런 機能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機構(예를 들면 人口政策調整局)가 適切한 部處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人口政策은 性格上 여러 部處의 업무와 관련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經濟·社會開發政策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의 政府組織上으로 보면 經濟企劃院에 人口政策調整局을 設置하는 것이 가장 適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人口政策을 뒷받침할 수 있는 研究機關들을 살펴본 결과 알 수 있듯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人口政策을 뒷받침할 수 있는 人口에 관한 綜合的인 研究機關이 없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러한 研究機關(가칭 人口研究院)이 설치되는 것은 아주 時急한 課題이다. 관계 기관에서는 이미 人口研究院 設立案까지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그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豫算問題, 部處間의 利害關係등 여러 가지 事情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理由는 政策者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機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研究機關은 어느 部處의 산하에 設立되든지간에 人口政策과 관련되는 정부의 各部處 및 機關과 직접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研究結果를 토대로한 政策의 樹立이 가능하고, 政策樹立에 필요한 研究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綜合的인 人口政策의 樹立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資 料

1. Hong, Sawon, et al, Population status report : Korea, KDI, 1978
- 2.李宗珍(ed), 人口와 家族計劃, 大韓家族計劃協會, 1977
3. 金道稔, 韓國人口問題의 未來, 並細亞政策研究院, 1978
4. 保健社會部, 人口研究院 設立(案), 未發表資料, 1978
5. 人口政策實務委員會, 人口研究院 設立(案), 未發表 資料, 1978